

“부동층 잡아라” 여야, 격전지 중심 총력 유세

민주, 중원·영남 막판 스피트
“힘 있는 여당 후보 밀어달라”
국힘 제주·대구·경기 등 순회
“이재명 정부 오만한 심판을”

여야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둔 1일 막판 부동층을 잡기 위한 격전지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등 이날 오전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마지막 현장 중앙선대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충북 괴산, 경북 안동, 울산 등 돌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충북 보은·옥천·충주·청주 등 중원지역 곳곳을 다니며 기초단체장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이재명 대통령 힘 실어주기 ▲내란 청산 ▲힘 있는 여당 후보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정 지지율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수 진영에서 이탈한 민심, ‘힘 있는 여당론’을 바탕으로 한 표심을 결집해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선거 의미를 거론한 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달라.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고 투표소에서 나온다”며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반헌법·반민주 세력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강력한 입법 지원, 2차 공공기관의 충남 유치 및 조속한 이전, 핵심 국책사업 지원,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전환 자금 확대, 주요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의 현안을 정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사수에도 막판 당력을 쏟고 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텃밭을 내줄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후보 지원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대표는 제주에서, 원내대표는 대구와 경기에서 표심을 훑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을 방문해 “국민의힘에 표를 모아주시는 것이 제주도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선택”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제주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 불리한 지역은 없다. 모든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라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국민의힘에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선대위원장은 “6월3일 이후 재판 취소, 세금 폭탄, 연임, 개헌 이런 것이 볼 보듯 뻔하다.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주어야 한다”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구와 경기를 오가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한 이진숙 후보와 함께 화원시장을 찾아 집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유세 중단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중앙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날 오전 대전에서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중단된 지방선거와 재보선 유세, 민주당의 사고 대응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세를 한 뒤, 경기 오산으로 이동해 이원재 오산시장 후보와 함께 오색시장에서 유세차에 올랐다. 또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그는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 잘 안다. 반성한다”며 “하지만 오만한 권력에 최소한의 견제는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공익신고, ‘로또’만큼 확실히 보상한다

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재원 통합
조인철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갑)은 1일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통합 조성·관리하기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는 담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식품·안전 위반 등 국민의 생명·재산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핵심 장치다. 특히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적·대규모 불법행위일수록 내부자와



국민의 신고가 결정적 단서가 된다.

그러나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포상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신고포상금 환수금 등으로 조성된다. 법안에는 기금의 용도를 신고포상금 지급 및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관리·운용 절차, 신고자 비밀 보장 등의 사항도 함께 담았다.

기금이 설치되면 개별 부처의 예산 사정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법안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파격적인 포상금 제도의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기금이 조성되면 재원 고갈 우려 없이 포상금을 제 때, 기여도에 걸맞은 수준으로 파격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불법행위로 적발된 제재금이 다시 공익신고를 장려하는 포상금으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金총리, 지방선거 뒤 사임 가능성

정치권서 후임 하마평 이어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김 총리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경선에 나서기 위해 적어도 이날 안에는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1년을 맞아 ‘2기 체제’로 전환할 타이밍이 됐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례 보고를 할 예정인 만큼, 이 자리에서 김 총리의 거취나 후임 발탁에 대한 언급이 오갈지도 주목된다.

여기에 김 총리는 2일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마련한 자리라는 게 총리실 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와 별개로 김 총리의 향후 진로에 따라 ‘고별 만찬’ 성격이 띠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다음 내각을 지휘하게 될 차기 총리에 대한 하마평도 쏟아지고 있다.

일례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용범 정책실장의 기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강 실장이나 김 실장 모두 중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후임을 구하기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1기 장관들 가운데 한 명이 고려될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낙점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김경관 산업통상부장관의 발탁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이에 더해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중진 중에서 총리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나아가 차기 총리가 지명된 뒤에는 자연스레 일부 장관들에 대한 개각이나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적 개편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맞물려서 나온다.

다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지방선거가 끝나지도 않았고, 김 총리 역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총리 사임설이나 후임 하마평을 얘기하기에는 이른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건강검진

매일체크 ✓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